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2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 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및 제10조).
- 바.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사.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아.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
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sjulee2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방향 및 전략
2. 추진체계와 기반구축
3.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자본확충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5.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자본 연구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적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
2.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분석
3.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연구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민·관 협력 증진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육성

- 6. 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 7.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 8.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주민조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